



## 도서관 콘텐츠와 책 읽는 사회 만들기

글 | 안 찬 수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 사무처장 / read3@chol.com

2011년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이하 책읽는사회)이 출범하면서 도서관 증설과 콘텐츠 확충을 국책사업으로 전개함으로써 도서관문화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자고 정부와 사회에 메시지를 발신하였다. 지난 10년 동안 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생겨났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더디긴 하지만 도서관 확충을 위해 정책을 입안하기 시작하였고 예산을 투자하는 등 도서관문화에 일어난 변화는 적지 않다고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오늘의 의제인 '도서관에서의 장서구입정책과 선정도서목록'이라는 것도 바로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도서관 콘텐츠 예산의 총액은 대략 2008년 432억 원, 2009년 505억 원, 2010년 500억 원(국내 공공도서관의 자료구입비가 도서관 운영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4.6%, 2009년 14.7%, 2010년 13.7%)으로 집계되는데,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꾸준히 상승하던 예산이 2010년에 하향곡선을 그리기 시작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도서관에서의 장서구입정책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장서구입정책을 제대로 펼치기 위한 선결 조건으로 도서관 콘텐츠 확충을 위한 예산의 획기적인 확보를 언급해야 할 것이다.

도서관에서의 장서구입정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 번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일반회계 예산 가운데 일정한 비율을 도서관예산으로 책정하도록 하라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도서관 확충기인 점을 고려하여 최소한 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예산의 2-3%를 도서관 예산으로 투여하도록 하라는 것과 함께 도서관 예산의 20-25%를 도서관자료 구입비로 책정하라는 것이다. (연구책임자 윤희윤, <한국도서관기준 개정연구> 국립중앙도서관, 2010)

두 번째, 현재 언급되고 있는 장서개발정책이 '도서관 하나의 장서개발정책'이 아닌가, '지역 단위의 장서개발정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여러 지방자치단체와 일부 교육청은 각 단위별로 도서관통합시스템을 구축해나가고 있다. 따라서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 지역주민에게 서비스를 감당하고 있는 도서관들

은 그 전체로서 장서개발정책이 요구된다고 말하고 싶다. 다시 말해 ‘지역 단위의 장서개발정책’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도서관의 지적 자유와 콘텐츠’의 문제, 즉 도서관이 지적 자유를 수호하는 기관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도서관의 발전을 위하여 ‘지적 자유’는 지속적으로 강조되어야 한다. 인간은 지식의 표현에 접근하며, 사상과 지적 활동을 창조하며, 자신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할 수 있는 기본권을 가지고 있다. ‘지적 자유’의 기반이 되는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는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한 쌍을 이루고 있다.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위해서는 알 권리가 있어야 하며, 표현의 자유는 정보에 대한 접근의 자유를 위해 필수적인 조건이다.

네 번째 제언은 객관성, 전문성, 공정성이 있는 도서 추천 과정을 만들어가자는 것이다. 이는 앞서 언급했던 2001년 8월의 ‘책읽는사회’의 사회적 제언에도 포함되어 있던 것이다. 그때에는 ‘공공도서관 필수 구입 도서의 공적 추천 제도 확립’이라는 표현으로 정식화되어 있었다.

끝으로 도서선정 목록과 관련해서 언급할 만한 것은 “추천도서목록을 만들 때는 선정자와 책, 수용자와 목록이라는 4가지 차원, 즉 목록 선정자의 철학과 가치관, 관련 도서, 목록의 수용자인 독자, 목록의 활용 방식 등의 차원을 복합적으로 아우르며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책으로따뜻한세상만드는교사들’, <책따세와 함께하는 독서교육-추천도서목록 만들고 활용하기>(2005년 9월 출간)

또한 “모든 목록은 항상 선정(selection)과 검열(censorship) 사이에 놓여 있다. 분명 목록을 작성하는 이는 이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만 한다. ‘목록이란 좋은 책을 적극 권한다는 의미에서 분명 의미 있는 일이다. 하지만 목록 때문에 다른 의미 있는 책들을 놓치게 된다면 그건 안 될 말’ (오진원)임에 분명하다. 그리고 ‘목록’에 대한 평가나, ‘목록’이 끼치는 영향력의 의미를 따지는 일은 목록을 만들어내는 것만큼이나 가치 판단이 필요한 일이라는 점도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안찬수, ‘책읽기, 권장도서, 도서관 그리고 공공성’, 2005년 <창비어린이> 겨울호(통권 11호) 2005년 11월 참조.)

십 년 전을 떠올려 보면, 오늘 논의의 의제인 “도서관에서의 장서구입정책과 선정도서목록”은 이제 출판문화·도서관문화와 독서문화를 양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질적인 차원에서 논의해나가자는 사회적 제안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출판과 도서관과 독서의 ‘질’이라는 것을 심도 있게 논의할 때가 되었다는 사회적 의사표현으로 이해해도 좋을 것이다.

“아직도 갈 길은 멀”지만 힘을 합쳐 함께 헤쳐나간다면, 없던 길도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도서관에는 콘텐츠, 즉 사람과 자료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책 읽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인 것이다. <sup>33</sup>